

남구 봉선동 학원가 학부모 ‘픽업차량’ 도로 몸살

봉선동 쌍용사거리 학원가 기보니

학원·승용차 가세 교통 정체 극심
갓길 불법주·정차에 경적·고성도
단속 카메라 고장...주민들 불만

광주시 남구 봉선2동 쌍용사거리 학원가 일대 도로가 학부모들의 ‘픽업차량’으로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경적이 울려대고, 학원 차량은 물론 승용차들까지 가세해 도로 양옆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할구청은 현장 단속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오후 3시께 봉선동 쌍용사거리 학원가 일대.

도로 갓길에는 학부모들의 픽업차량들이 수십대 줄지어 있어 주차장을 방불케했다.

이미 불법 주·정차한 차량 옆에 이중으로 주차한 차도 있고, 아예 횡단보도를 차지하며 차를 세워둔 경우도 목격됐다.

학원 차량에서 하차한 학생들은 갓길을 점거한 학부모들의 불법 주차로 아쩔 수 없이 도로 한 가운데서 차량들 사이를 비집으면서 아슬아슬하게 차도로 내리고 있었다. 한 학생은 차량

사이를 지나가다 갑자기 출발하는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밤 10시 학원이 마칠 시간이 되면 학원가 주변 도로 정체는 낮보다 더 극심하다.

차량 한대가 머무르는 시간은 비교적 짧으나 한 대가 떠나면 다른 차량이 곧바로 주차하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었다.

교통 체증으로 인한 경적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대며 운전자끼리 창문을 내리고 고성아 오가기도 했다.

봉선동 주민 박모씨(29)는 “수 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교통체증을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학부모들의 픽업차량들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피해만 늘고 있다”고 성토했다.

관할 구청인 남구도 학부모들의 픽업차량이 잠시 정차하고 떠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구는 지난 2007년 학원가 인근 사거리에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만 대부분 단속을 의지하고 있다.

실제 남구는 지난 5년 동안(2018년~2022년 7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로 1,107건을 단속했다.

해마다 300건 이상 단속했지만, 이마저도 단



18일 오후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학원밀집지역 인근 도로에 상가방문 차량, 학원 픽업 차량 등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에 막혀 2차선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등원하려는 어린이를 하차 시키고 있다. /김성훈 기자

속카메라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2020년 37건, 2021년 148건 밖에 단속을 못했다.

이처럼 쌍용사거리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선 고정형 단속 카메라와 현장 단

속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쌍용사거리 일대의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남구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경찰과 수시로 합

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 픽업 차량들을 고정형 단속카메라로 단속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장 단속을 늘리는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배전노동자 “불법하도급 만연”

노조 “비율 58% 달해” 수사 촉구

한 달 넘게 파업중인 광주·전남 배전 노동자들이 한전 협력업체 내 관행적인 불법 하도급 실태를 폭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분부는 18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한국 전력은 이미 불법 편법 하도급 실태를 알고 있다”며 “한전이 협력회사들의 불법 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전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광주·전남 지역 불법 하도급 비율은 58%이며 하도급 공사 금액 원가는 65%가량이다”며 “광주·전남 지역 업체 중 절반 가까이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다”며 “모 전기 업체는 낙찰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직원

들을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하청업체가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등 전기공사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명의 대여, 불법 하도급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목숨 걸고 일하는 죄 없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이윤을 착취하는 불법 하도급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불법 하도급에 있다.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배전 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회견을 마친 노조는 광주시경찰청 민원실에 불법 하도급 연루 의혹이 있는 지역 내 전기공사업체 A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는 임금·노동조건 개선, 하계 유급 휴가 3일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이날로 총파업 40일째다. /임재민 기자

발달장애 아동 학대 의혹...경찰, 수사중

발달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발달장애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발달장애 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지난 14일 접수했다.

부모는 자녀의 몸에 상처를 발견, 어린이집 CCTV 녹화본을 열람해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을 알려졌다.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을 의자에 못 일어나게 하고, 무릎으로 눌러 억지로 재웠다고 피해 아동의 부모는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경찰청은 CCTV를 압수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환준 기자

‘에어화살총 사건’ ...경찰관 현장 대응력 강화

전남경찰청은 최근 여수시에서 발생한 ‘에어화살총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은 19일부터 1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경찰관서 출입자 감지 센

서와 차량 이용 피습 방지시설 등 청사 방호 시설을 정비한다.

또한 관서 내 경찰봉, 방탄·방검복 등 경찰장구류 비치 및 활용 실태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선거법 위반’ 전직 도의원 집유 벌금 400만원...구민에 배 선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전직 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전 전남도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도와 범행한 윤모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지역구 마을 이장 등 선거구민 66명에게 총 166만원 상당의 배 선물 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현직 도의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일반인보다 더 큼에 선거구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www.dklmc.co.kr

도경건설 주식회사는

도로포장 전문 업체로서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특히 30여개를 등록하였고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에 9가지 기술을 등록,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결빙방지재를 생산하는 라인을 완성하여 SOC기술마켓에도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한국형 포장기술을 완성에 나아갈 것입니다.



길 만드는 사람들
도경건설(주)
DOKYEONG Construction CO.,LTD

대표이사 **신현국 박정연**
Tel. 061 _ 393 _ 3315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봉암로 910

결빙방지재
(Grikol)

균열보수재
(DK-Creak Sealer)

반강성주입재
(Semi-rigid Pave)

고성능개질콘크리트
(BLMC)